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 비치 확산

노동부는 2.16(월) 전국 15개 대형 유통업체 소속 427개 매장 중 111개 매장에서 계산원 안내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였으며, 나머지 매장도 금년 내에 의자를 비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111개 대형매장에서 의자를 비치하고 이중 4개 매장은 근로자가 앉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유럽식의 좌식 계산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피로예방매트 설치(4개 유통업체), 건강체조 및 교육 실시(4개 유통업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2개 유통업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직 의자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대형 매장은 금년 내에 모두 의자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은 향후 리모델링 매장 또는 신설 매장을 대상으로 좌식계산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주 간담회, 관리자교육, 홍보활동 등 의자 비치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0월 대형 백화점 및 마트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개선을 촉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09.2.16(월) 우수 개선 사업장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하여 계산대 개선 사례를 시찰하고 직접 계산원 업무를 체험하는 등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의자 비치, 좌식계산대 설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지도하고 단계적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날씨가 풀릴 때, 건설현장 사고위험은 높아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 이 보급된다.

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반 및 토



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 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토사붕괴 등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인화성물질 관리실태 등 화재예방 조치, 추락재해예방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기타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중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이 포함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l)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08년 재해를 감소, 산업재해는 6.3% 증가

2008년 한 해 동안의 산업 재해자 수가 총 9만5,80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성 사망자 수는 1,44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으며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2,42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명(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중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3대 다발 재해는 전도와 추락, 협착 사고이다. 전도 사고자는 14.1% 증가한 2,296명이며, 추락사고자는 15.8% 증가한 2,193명, 협착 사고를 당한 사람은 4% 감소한 631명이다.

재해자는 주로 제조업(37%)과 기타 산업(35%)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5인~49명의 사업장(제조업 1만7,457명, 기타 산업 1만5,408명)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다발 업종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금속제품 등 제조업으로 인한 사고가 5,8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계기구 제조업 종사자로 5,491명, 화학제품제조업 종사자 2,911명의 순이다.

기타 산업부문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 각종 사업 종사

자가 1만8,799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4,012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2,407명 순이다.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28%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2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경우 재해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79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는 17.2% 감소한 15명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 수 중에서 외국인 재해자 및 사망자의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재해자는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올해 산업재해 10,000명 줄인다”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추락, 협착, 전도 등 3대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금년 중 사고성 재해 10,00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의 사업 5개, 건설 6개 공종) 100,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 아래 금년 한해 총 1,955.8억(시설개선용자 1,000억, 클린사업 740억, 기술지원 215.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집중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재감소추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해비중이 큰 3대 다발 재해를 향후 5년('08~'12)내 '07년(4만여명)에 비해 절반수준(2만여명)으로 줄이기로 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을 기획한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년 정체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치밀한 전략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종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석면을 해체·제거작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석면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할 계획이다. ☺